# 글로벌 뉴 이코노미 : 도전과 한국의 활로*

楊秀吉

우선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공일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바쁘신 시간, 차가운 아침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림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전부터 제가 친히 알고 모시든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뵙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귀국하게된 기회를 이용하여 지난 20개월간 OECD 대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배우고 느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요즘 국내는 물론 OECD와 그밖에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이야기되고 있는 글로벌화와 지식경제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접목한 글로벌 지식경제를 주제로 제가 평소에 느끼고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대사로 나가기 전까지는 미처 잘 몰랐었는데 막상 OECD 대사로 부임하고 보니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거기서 본격적인 연구 · 조사를 할 기회는 없었고, 다만 글로벌 지식경제에 관한 하나의 제 자신의 에세이를 정리해 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지식경제에 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림으로써, 경제정책 분야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의 담론을 유도해 보고자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된 목적입니다.

미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91년 이래로 중단없이 높은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로 떨어져 있고 물가도 안정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미국경제가 전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례없는 안정 · 고도성장이 미국에서 지속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미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의견이 이제는 중론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에 따라 소위 신경제론(new economy)이 요즘 대두되어 여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성장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올해부터 2~3년에 걸쳐서 각 국가간의 경제성장률의 차이와 경기변동이 있고 없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큰 윤곽으로 볼 때 특히 미국의 경우 80년대 말 이후부터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가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지속적 성장은 지식경제의 대두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라 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즉 생명기술, 교육 등 지식집약 활동이 경제 내에 계속 확산되어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성장이 과거 이론처럼 토지나 자본의 축적 여하에 따라 제한 받기보다는 신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식이 이처럼 경제성장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물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네트워크(digital network)가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행위가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편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는 현재 미국지역에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만, 지난 2~3년간에 걸쳐서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뿌리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글로벌화되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지식경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지식경제는 하나의 장기 추세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해서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대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걸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약 3% 수준이었는데, 이 지식경제의 확산을 잘 유지하고 활용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약 30년간은 연평균 4~5%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굴곡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소위 장기성장(long boom)이라는 표현이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지식경제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작용이나 부작용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지식경제 잠재력의 현실화 여부가 결정되고 또 21세기의 정치 · 경제적 세계질서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1월말에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는 것은 글로벌 지식경제의 전개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은 1월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식기반 경제를 주요 정책이념의 하나로 표방을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한지 이미 꽤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지식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선진경제로 도약(leapfrog)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의 도전과제들을 잘 파악을 하고 대응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미 구체적인 주요 전략적 과제를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정책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체계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까지 오랜 동안 우리 나라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는 중화학 공업화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대체해서 새로운 글로벌 지식경제에 걸맞는 새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ECD는 선진국들이 주요회원이 되어, 각국 경제 및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서 회원국들의 장·단기 대책 또 이들 사이에 정책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정부간 연구기구 혹은 정책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OECD는 글로벌 지식경제의 도전에 대해 함께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기반 경제를 추진하는 우리 나라도 OECD를 재조명하고 그 활용 대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지식경제의 특징 몇 가지와 거기에 따른 도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의 원동력은 기술변화입니다. 100여 년 전에 대두된 증기기관, 전기, 내연기관 등과 같은 기술이 시간을 두고 다른 새로운 기술들의 복합체를 파생시키면서 각국 또는 세계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기술, 소재혁명, 유전공학 등이 새로운 밀레니엄에 있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범용기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가장 성숙된 것이고 정보통신기술로 인해서 소재혁명이라든지 유전공학이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중요한 범용기술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범용기술이 확산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산업,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구조가 함께 변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기술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수용능력이 기술변화에 맞추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는데는 그러한 제도적 개혁이 점검되고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점검해 보면 먼저 경제분석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는 소위 생산함수 개념이 이제는 퇴장이라면 좀 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 전통적 생산함수 대신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산함수 속에는 각종 물질적 하드웨어(hardware)와 지식근로자가 있는데, 지식근로자는 자기 머리 속에 있는 지식, 즉 웹웨어(webware)를 사용하던지 또는 동시에 코드화된 지식, 즉 소프트웨어(software)를 사용하면서 생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책에 활용하는데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과 지식의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의 주가가 무한대로 오르는 현상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직의 변화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의 산업사회에서는 명령과 통제를 위한 위계(hierarchy)가 구축되어 100여 년간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행되어야 됩니다. 권한의 하향분산이 이루어지고 수평조직간으로 분산되어야 됩니다. 많은 민간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잘 적응해 온 반면, 정부 혹은 관료조직의 변화는 늦은 편입니다. 관료조직이 명령을 받아 집행되는 조직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하고, 그 역할도 이제는 지식창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쪽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양성을 위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모델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것이 주입식 교육이라기보다는 창의성과 혁신능력을 개발하는 그러한 교육, 즉 무형의 기술, 독자적인 사고방식, 창의적 본능 등을 습득해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제도가 여기에 적합한지를 규명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난제중의 난제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관리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식근로자는 머리 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장을 떠나서 새로 직장을 갖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장을 만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근로자들의 이동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단순히 금전적인 인센티브에만 응하지 않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창조의 보람, 쾌적한 작업환경,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인센티브 체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식근로자를 경영자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상호협력과 유대감을 조성하고 위험을 공동부담시키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R&D 투자가 조장되고 대학, 정부, 기업간에 적절한 연구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지식경제에서는 지식이 창출되도록 조장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창출된 지식이 확산되도록 조장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될지, 아니면 지적소유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해 주어야 될지 그리고 지식을 가격으로 산정할 때 어느 정도가 합당한 것인지, 다시 말해 지식에는 공적소유 개념이 있어 이것을 시장메커니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또는 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술,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제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 또 금전적인 거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초적인 국제 자유상거래 질서는 OECD의 추진 하에 이미 실행계획을 만들어 집행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지식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역과 투자가 자유화되고 기술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글로벌화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시장이 개방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투자정책과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물론 경제 전반이 글로벌 지식경제 체제에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직접투자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 기반을 둔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구 환경보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보장이 되어야만 글로벌

지식경제도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도 한편으로는 초국가기관 및 국제기구로 부분적인 이양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로도 부분적인 이양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지식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새로 창조되는 패러다임과 기존 패러다임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적 실업이 다양하게 대량 발생할 수 있고, 실업은 아니라도 저임금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이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육과 재훈련을 하더라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선상에서 볼 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식을 가진 자(know)와 못가진 자(know-not) 간에는 소득과 부의 분배상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식근로자의 시장에서는 기회도 많지만 경쟁 또한 치열하게 되어 고용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어 고용과 관련된 불안과 스트레스가 상존하게 됩니다.

지식을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흐름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 흐름의 내용을 규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음란물이라든지 또 기타 유해정보의 유통도 자유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아메리카 온라인(America On Line)과 타임워너(Time Warner) 합병으로 극화된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상품화되어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간에 문화의 동질화가 진행되고, 특히 미국 문화상품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미국문화가 지배하는 경향이 대두될 것입니다. 또 영어가 당연히 매체로 쓰이게 됨에 따라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그 자리에 미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경우 여기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권한, 특히 정부의 과세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업할 장소를 선정할 때 세금이 낮은 쪽을 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감면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인식한 OECD에서는 유해한 조세감면경쟁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문제로 특정한 국가주의의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私見입니다만, 예컨대 중국과 같이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해야 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독특한 가부장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화에 있어서 현재 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조만간 이것이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경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현상이 발생

하게 되어 국제시장의 공정경쟁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요즘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M&A를 통한 대형화 경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이 주요 문제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글로벌 지식경제의 대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글로벌 지식경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은 글로벌 지식경제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애틀 회의가 결렬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글로벌화의 부작용과 거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중 하나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따른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불만과 관련된 것으로 마틴 울프(Martin Wolf)가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紙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최부국과 최빈국의 소득격차가 200년 전에는 3:1, 100년 전에는 10:1, 그리고 지금은 60:1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도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성장률이 높게 유지된 나라, 즉 3%정도로 유지된 나라는 33개국에 불과하고 55개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오히려 2%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통계나,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무역적자가 GDP 대비로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통계 등이 개도국들의 이와 같은 불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환경과 노동기준을 토의 의제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회의가 결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환경과 노동기준을 토의하자고 한 배경에는 그 선진권 내에서의 시민단체들, 특히 노조와 환경단체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저지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인데 이런 여론 자체가 바로 글로벌화의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애틀 회의가 결렬된 것은 결국 글로벌 지식경제에 대한 관리체제(governance)에 대해서 국제적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요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지식경제의 관리, 즉 글로벌 관리체제를 어떻게 개발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다보스 회의에서는(이번 회의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 지식경제의 시민답게 인터넷을 통하여 회의에 참석한 것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글로벌 지식경제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그 토론의 초점은 오히려 그에 따른 문제점들에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지식경제가 살벌한 경제현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value) 간의 마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

로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추진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만으로는 안되고 당연히 대기업들은 물론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포함된 3자간에 하나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형성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각국 경제와 함께 세계경제를 관리하는 관리구조를 구성해야 된다는 데에 일반적인 공감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애틀에서 표출되었던 시민단체들의 불만은 "글로벌 지식경제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대기업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정부와 대기업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응하여 3원적인 파트너십 구조하에서 정부는 시민들과 이 구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대기업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추가적인 경영철학으로 받아들여 기업을 경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3원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윤리적 · 도덕적 차원에서 공통적인 가치를 도출하고, 정부는 이러한 가치에 기반을 둔 지도력(value-based leadership) - 이것은 지난번 다보스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 을 행사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론들이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제 구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라도 글로벌 지식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하며,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확충하고 또 인적자본 개발대책도 세워야 하는 등 지식경제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제반측면을 고려하는 주요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다소 보완하는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지식경제에서는 사회적인 결속이 중요한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의 하나라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계층들도 국가와 글로벌화에 하나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가관리체제도 점검되어야 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방향 감각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 시민사회가 지금 큰 주요세력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대해 여러 사람들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간의 3원적인 파트너십의 정립이 불가피하고 또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단계여서 여러 가지 진통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시민사회가 정책결정과 국가관리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업도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면서 일종의 자기쇄신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관료 조직의 기능을 전환해서 이제는 생각하고 연구

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얼마 전에 이미 큰 규모로 단행되었고 또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계속 검토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 운영방식 및 활동방식(modus operandi) 자체를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바꾸는 것이 기구적인 행정조직 개편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駐OECD 대사로 부임한 이후에 각별한 느낌을 갖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사회에게도 스스로 경제적 · 사회적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지역개발 관리체제를 보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어느 부처도 주인의식을 갖고 조정(coordination)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없으며, 설혹 조정책임을 느낀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개발의 한 측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들은 현재 인적자본 면에서나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차원에서 글로벌화, 지식경제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지역개발 관리체제(territorial governance)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선 지역개발을 물리적인 하부구조 확충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간적으로는 물론, 사회적 · 문화적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배양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종합적 ·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조직이 정비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에 입각해서 그동안 정부에 여러 번 건의한 결과 OECD의 지역개발위원회가 우리 나라의 지역경제개발 체제에 대한 건강진단을 겸한 국가검토회의(Country Review)를 금년 7월에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사 · 분석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3월초에 KDI 국제대학원 주관으로 국제회의도 개최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는 날로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그 귀추와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정책개념으로 혼동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으로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글로벌화보다는 좀 진부한 단어이면서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못했던 국제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의 여러 가지 관행이 국제화되고 또 생활영어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일본의 자문위원들,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에 자문하면서 건의하기를 '영어를 제2공용어화 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우리 나라도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글로벌 리더십, 국제사회에서의 소통능력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개념에는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자신이 유럽에서 직접 근무하며 스스로 깨닫게 된 것중 하나입니다만, 문화정

책이 재조명되고 좀 더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각 지역에 지방 문화자원이 발굴되고 보존되어 각 지역별로 박물관이 방방곡곡에 설치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념적으로도 예술의 향유를 사치스런 관행으로 보지 말고 서민층들도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술의 향유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치열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공동화(空洞化)되고 메말라 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치와 내용을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예술과 연계된 취미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선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이 이러한 정책을 이미 채택해 왔습니다만, 작년 6월에 프랑스 문화부가 새삼스럽게 문화생활 민주화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민주화라는 개념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즉 문화생활을 민주화한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만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민들도 골고루 향유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의 입장에서 관찰한 저의 소견으로는 문화생활의 중요성이 문화향유의 민주화, 즉 분배측면보다도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창의력을 배양하게 하는 동기부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재의 교육제도가 아직 이와 같은 창의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서 공적 교육(formal education)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연물을 관람하거나 훌륭한 예술품을 대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되고 그 작품이 의도한 주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동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창의성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담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하나의 담론이 일상화되면 이것이 창의성을 자극하는 기능으로 발전하게되어 일반적으로 지식경제에서 요구되는 어떤 능력,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이나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프랑스와 이태리의 여러가지 패션 상품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지식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즉 우리 나라의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세계적 관리체제(global governan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글로벌한 문제, 예컨대 제3세계 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로 생각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제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 흐름의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한, 우리가 세계적인 관리체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적인 문제에 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지구적 환경문제라든지, 제3세계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 · 토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우리 나라의 국익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보

편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계적인 가치(universal value)에 문제를 수용하고 주장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OECD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와 국익을 조화시키는 실제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안과 입장을 개발해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 관리체제에 대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웃 나라들을 포함한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이러한 기능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특정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입니다. 이것은 특히 김기환 박사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포부와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지역통합 노력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유럽(Euro)이 출범되면서 지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의 가장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국제회의에 가면 유럽과 미국 얘기만 하지 아시아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언급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적인 결속이 있어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경제통합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지식경제체제하에서의 우리의 대응과제에 대한 저의 평소 소견과 몇 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간략하게 OECD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OECD의 개요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2년, 3년 단위로 채택하여 회원국 공무원들이 참여 · 토론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자문은 사무국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OECD의 여러 가지 연구과제는 크게 보아서 회원국 각국의 경제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제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제문제에 공동대처하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과제의 결과들을 가지고 비회원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대화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가 매년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100건 이상이지만 그 중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서, 특히 그 결과가 중요하여 그 중 대부분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과제 몇 가지를 아래에 열거해 보았습니다. 연구과제를 종료하는 데에 2~3년이 소요되는 이유는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각 나라의 현황을 점검하고, 두 번째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선의 정책(best practice)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후 그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각 나라의 실태를 평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 지난 3년간 OECD가 수행했던 주제별 연구 · 협의사업 중 의의가 컸던 사업 〉

- 지속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교또의정서 이행방안
- 환경정책과 경쟁정책의 통합
- 개발원조전략의 전환 : Development Partnership Strategy
- 규제개혁: 추진지침 개발 및 국별심사
- 새 WTO라운드 주요의제 분석
- 다자간 투자규범 및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국제뇌물공여금지협약 : 발효추진 및 집행체제 점검
- 기업지배구조원칙 : 제정
- 불공정조세감면경쟁 방지
- 경성카르텔 금지 : 추진
- National Innovation System : 비교연구
- Mega Science Forum 및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 설치 및 추진
-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 정립
- Jobs Strategy 및 Active Labor Market Policy : 운용추진
- 인구노령화(Ageing)와 연금 : 문제점과 대책
- 보건의료통계 : 구축 및 추진
- 평생학습 및 성인교육 실시방안
- 회원국 농업정책개혁 : 원칙수립 및 실시점검(반복사업)
- 농업의 다원적 기능 : 연구
- 책임어업의 효과와 대책

우리 나라의 OECD 가입 의의에 관해서는 그 동안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OECD 가입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또 세계경제 운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데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세계경제문제 관리에 관한 주인의식을 말씀드렸는데, OECD에 대한 예산 기여도를 보면 우리 나라가 상위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회원 20개국 중에서 9위이며 유럽 선진국의 대부분 국가들보다 우리의 기여도가 큽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그러한 비중에 걸맞는 주인의식 행사와 영향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가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OECD 가입에 따른 잠재적인 혜택 열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4가지는 우선 OECD가 분야별로 회원국 공무원들이 모여서 연구 · 토론하는 대학원의 세미나 과정과 유사한 연구 · 학습기구라는 것, 두 번째는 서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소위 도덕적 압력을 가하는 동료압력 행사기구, 즉 페어플레이 기구라는 것,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 생명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는 첨단적인 문제들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기구라는 것, 네 번째는 이러한 연구들을 배경으로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국제규범(global standard) 또는 경제질서들을 예비적으로 협상하는 기구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 OECD 가입에 따른 잠재적 혜택 〉

① 회원국들과 주요 비회원국의 경제 및 각종 제도의 현황에 관한 정보와 자료 수집 채널
②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현황을 다른 OECD국들과 비교평가(benchmarking)할 수 있게 하는 국제비교통계체제
③ 최선의 정책 및 건전한 국가경영(good governance)을 배우게 하는 정책담당자들간의 연구세미나 과정
④ 우리의 경제사회문제 진단 및 대책을 평가해 주고 그에 따른 개선을 충고해 주는 선의의 동료압력(peer pressure) 행사기구
⑤ 전자상거래, 생명기술 등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emerging issue)들에 대한 첨단적 연구 · 대응 추진체
⑥ 무역, 투자, 금융, 환경 등 여러 부문에 걸친 국제규범 및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s)의 정립을 위한 예비적 협의 · 협상체
⑦ 경제개발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통해 OECD 비회원국들과의 동반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OECD 비회원국과의 교류기구
⑧ 우리 경제의 장점과 개혁실적을 국제적으로 주지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경제홍보기구
⑨ 공무원들의 전문화 및 국제화 훈련과정
⑩ 회원국 정부 공무원들간 인적교류망

우리가 OECD에 가입한지도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개월 전에 2대 대사로 부임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OECD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개 회원국 중에 最新規회원국일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신규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고, 경제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가장 가까우며, 또 97년 외환위기 당사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난하게 이 낯선 OECD라는 체제에 적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대외개방으로 선회하게 됨에 따라, OECD의 평가와 충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수용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개혁 실상을 OECD에 참여하는 여러 외국 정부공무원들을 통하여 선진권에 폭넓게 홍보해옴으로써, OECD가입 의의는 충분히 살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반성해 보건대 OECD의 여러 가지 잠재적 혜택을 거양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곁들인 자성을 해본다면 아직도 OECD 각종 연구협의에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 물론 여기에는 저도 포함됩니다만 – 일부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이라는 점을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관한 언급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흥미가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OECD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연구협의 결과물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조차도 OECD 발간물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지 않고 있었고, OECD의 여러 가지 내부자료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공급되는데 이에 대한 이용도도 크지 않은 것 같아 많은 좋은 자료가 死藏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OECD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나라 정부관계자들은 흔히 OECD 사무국 관계자와 주로 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OECD의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OECD내의 각종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추진되고, 합의됩니다. 사무국은 우리 나라의 하부구조, 즉 우리 나라는 이사이고 사무국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하부기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인식하여 OECD의 각종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ECD 및 다른 국제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 중, 외교통상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OECD의 모든 기능을 빠짐없이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對OECD 전략, 다시 말해 OECD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내각에서 우리 나라 각 부문별로 OECD 활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정책건의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OECD가 연구하는 주제에 대응하는 국내연구를 동시에 진행시켜 그 중간결과물 혹은 최종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나라 관계 공무원들이 OECD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해야 하는데, 그러한 국내 대응연구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정부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모여서 분야별로 OECD 연구사항을 같이 연구 · 토론하고, 그 중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기관의 1년~2년 연구과제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례 OECD 논의 연구회' 와 같은 것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분야별 논의활동을 1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만 앞으로 OECD 연구과제에 대해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저희 대표부의 경우 제가 현장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많은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OECD 연구회가 외교통상부 주도하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OECD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와 중요성이 있는 정책주제에 관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한다던가, 토론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